

# “협동조합, 스마트공장 동반 구축 한국형 패키지 모델 수출 추진”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취약 기술 보완·업종별 경쟁력 제고  
금융 지원·공급기업 역량 평준화 중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성장본부를 신설했다. 제조혁신실, 스마트공장지원실, 상생협력부, 기업승계지원센터, 단체표준국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본부는 중소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의 선봉에 서있다.

중기중앙회는 작년부터 대기업과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전 컨설팅과 애로 상담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협동조합을 활용한 업종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제조업 협동조합은 전국 448개, 3만3000개 중소기업으로 전체 업종을 망라한 유일한 동일업종 조직”이라면서 “올해부터는 동반구축 모델을 통해 개별구축 사업 한계를 뛰어넘어 동일 업종 사업 참여자 공동구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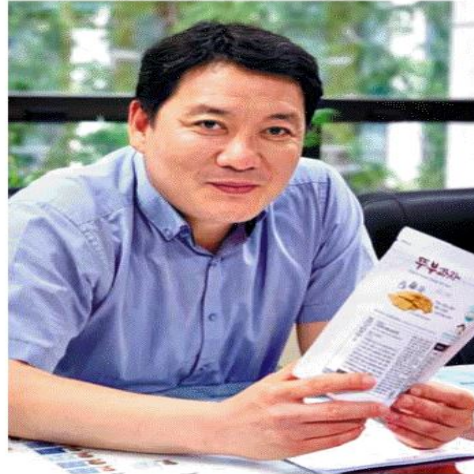
스마트공장 구축에 있어 국내 요소 기술이 취약하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 차이가 크다. 스마트공장 공급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주요 기술 경쟁력이 대부분 선진국의 70% 미만 수준이다.

양 본부장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협동조합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협동조합형 사업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조합원사가 스마트공장을 동반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양 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및 교육 지원, 공동사업 연계, 빅데이터 수집 등을 담당하면 조합원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개별 단위 구축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업종별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대일 담당자 교육이 아닌 협동조합이 매개체가 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규격 제정 등에도 업종별 협동조합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창구 역할이 될 수 있다.

양 본부장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



양찬희 본부장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두부과자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삼성전자 도움을 받아 공장 혁신에 이어 판로 확대에도 성공했다.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업종별 협동조합이 ‘매치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가구 등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은 제조환경도 비슷한데, 이들이 공동 스마트공장 솔루션이나 센서를 개발·구축하고 이러한 레퍼런스가 쌓여서 공급 기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신남방 동남아지역의 제조환경이 국내와 비슷한 발전단계를 밟아오는 만큼 우리가 먼저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패키지형 해외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수요기업(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이 한국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동반 수출하는 방안이다.

양 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물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공장은 제조업 생산성 증대와 매출 증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스마트공장으로 생산성과 경영이 개선된 기업에 기술 연구개발(R&D)·금융·수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양 본부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선 공급기업 역량 평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공급기업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공급기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효율적 매칭 시스템을 위해 우수 공급기업 리스트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